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일파만파… 청문회 최대 쟁점 부상

〈법무부장관 후보자〉

“공익 목적의 청탁이었다” 주장
제넨셀 대표, 1심서 징역 3년
민주당-한동훈 공방까지 격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떠오른 ‘신약 임상승인 청탁 로비(신약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청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진실성이 훼손되고 사건 자체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입장 발표만으로 사태가 진정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신약 로비 의혹은 지난 2021년 제넨셀의 설립자인 강모씨가 정치권과 친분이 두터운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초선 의원 이었던 김승원 후보자에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 2·3상을 승인을 목적으로 식약처장에 민원을 넣게 한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10월12일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 절차 실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를 넣었다. 2주 뒤인 10월26일 식약처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2·3상을 승인했다. 당시 제넨셀은 100억 원대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었다.

제넨셀의 설립자인 강모씨는 식약처의 임상 승인 전인 10월19일 세종메디칼에 자신이 보유한 66만주를 63억원에 팔았고, 제넨셀의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승강기에 올라 손을 들고 있다. /뉴시스

세종메디칼에 양도했다. 브로커 양모씨는 임상 승인 로비 대가로 제넨셀 측으로부터 6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모씨는 임상 승인을 계기로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 100억원대 정부 지원금을 타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동물 실험을 진행하던 중 실험 개체가 죽거나 피를 토한 부작용 사례를 사제하고 허위 실험 서류를 제출해 공모에서 탈락했다. 강모씨는 이와 관련 약사법 위반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양모씨는 강모씨와 함께 민원 청탁을 위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형태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후보자는 직접적인 금품수수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의 최대주주에 올랐고, 임상 승인 후 세종메디칼 주가는 8450원으로 급등한 후 세종메디칼 지분을 확보하고 있던 3개 투자조합이 이틀만에 보유 지분을 모두 팔아치웠으며 이로 인해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5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후 세종메디칼은 2024년3월29일을 끝으로 거래가 전면 정지됐고 지난6월11일 상장폐지 결정됐다. 세종메디칼 소액주주들은 최고점 대비 95% 주가가 하락하는 피해를 봤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며 “당시 수사가 진행됐던 시기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3년여 동안 10여 명의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탈탈 털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며 정치검찰에 의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 민원 전화를 건 사실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 다국적 회사들이 당시 한국에서 1조~2조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국내 제약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서 공정하게 그리고 자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측은 ‘우연히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 달리 그 전부터 교류가 있었음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면서 친분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양씨의 청탁을 받고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임상 실험 절차 신속 처리를 부탁했던 것도 부적절하게 사건에 개

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넨셀이 허위 실험 자료로 임상 승인을 신청했고, 양모씨가 임상 승인의 대가로 자기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적인 목적의 청탁으로 볼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의 상세한 소명을 요구하면서 녹취록 등 자료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며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의원이)판결문과 검찰 불기소 이유서 판단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이어가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것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동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철없는 관중’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오판 독약 로비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국민만 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정점식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서 **李** 경제정책 맹목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11% 상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 겨냥해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칙이 하나 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초,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정비보다 쉽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투기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라며 “주택시장의 공급자인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이미 다른 곳으로 밀려난 세입자도 있을 것이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라”고 보탰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을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면서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의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다”며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은 수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놓고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키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다”며 “외신은 코스피를 ‘오징어게임’이라며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평가를 했다. 국내 투자자는 코스피를 보면서 ‘홀썩게임’, ‘잡코인’이라고 자조한다”고 했다.

또 “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사실상 빚투를 조장했고 지난1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언급한 이후 4개월 만에 관련 상품이 출시됐다”며 “정부는 증시 변동성의 원인 제공자”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고 규정하며, 이에 맞설 7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7가지 대안으로는 ▲치안 바로 세우기 ▲국민 재산 보호 ▲선관위 감시 ▲국민 주거사다리 수호 ▲국민 노후 보장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국가 안보 확립 등이 있다.

한편, 정 원내대표가 안보 관련 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야의원석에서 고성이가오기도 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들이 무슨…”이라는 항의가 나오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싫으냐”고 맞받았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양당 의원들을 향해 “자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 니콜라스 홀에서 열린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프랑스, K-콘텐츠에 1조6000억 투자

李 대통령, ‘뤼미에르 서밋’ 공동 주재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제 영화·영상정상회의의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 주재하며 K-콘텐츠 세일즈에 나섰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는 영화·영상 산업 분야에 5년 간 총 1조6000억원(약 10억유로)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 에마누엘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영상산업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알리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양국은 ‘뤼미에르 파트너십’으로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향후 5년 간 각각 5억유로(약 8000억원), 총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양국은 독립 펀드를 통해 자국 영상산업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동제작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이고 개방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최초로 개최된 영화·영

상분야 국제 정상회의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을 통해 영화·영상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극장의 위기 극복과 인공지능(AI)의 조화로운 공존, 독립영화 및 다양성 보호, 로컬 콘텐츠와 글로벌 플랫폼 간 상생을 제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테이블, 미국영화협회(MPA) 회원사 집견, 영화인과의 대화 등의 자리를 통해 K-콘텐츠 세일즈도 했다. 이 대통령은 넷플릭스·디즈니·소니·NBC유니버설 등 주요 스튜디오·플랫폼 관계자들과 만나 “엄청난 큰 투자를 통해 대작을 만들지 않아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누군가의 공감을 얻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작품을 만들고, 또 소재를 발굴하고 이런 분야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창동 감독, 배우 설경구·전도연씨 등이 참석한 ‘영화인과의 대화’에서는 K-콘텐츠의 성공 비결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서예진 기자 syj@